

상장사 · 중소기업의 투명한 회계 · 적법 세금 · 성공 경영 정보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공인회계사 조세 저널 taxpark.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

중기업
경영관리
외주화

2020/ 8/ 19 통권 1480호

CEO · CFO · COO · 회계책임자 · 조세전문가 · 재정실무자 · 총무담당자 · 모든 관리자용 **名品** 주간지

CEO 에세이 - 이해익원장

고객실수라도 애프터 서비스 철저히

지방세 지원 강화

경영관리임직원 재경컨설팅 제안

■ 박윤중 회계사 :

90세 장수 부모의 아파트 시세 12.5억(원가6억), 금융
부채 2.5억의 증여세와 상속세 간략 비교

CFO · 회계실무자 · 조세전문가 정보

- 복리후생목적으로 구입한 콘도회원권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함
- 지방세 지원강화로 지역경제 재도약을 뒷받침한다
- 다주택 취득자 등 부동산 거래관련 탈세혐의자 413명 세무조사 착수
- 다수의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 탈세혐의자 세무조사
- 코로나19로 인한 반기보고서 등 제출지연 관련 제재면제
- 고용노동부, 2021년 최저임금 시간급 8,720원으로 고시

CMO · 마케팅 Tax consulting 색션

- 순자산가치로 비상장법인의 주당가격 주식 평가시 전환권은 행사하지 않은 전환사채는 아직 주식 등에 포함안됨 (p.12)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計經營戰略

< 개인유사법인의 초과유보소득을 배당금으로 간주하여 원천징수하고 종합소득에 합산하는 세법개정안의 적합성 분석 >

1. 대상 : 개인사업자와 유사한 법인의 초과유보소득(최대주주와 특수관계자 지분합계 80% 이상)
2. 과세방법 : 배당간주금액 = 초과유보소득 (=유보소득 - 적정유보소득) × 최대주주 등 지분비율
유보소득 = 각 사업연도소득(세무상 순이익) + 과오납이자 등 - 세무상 이월결손금, 세금
적정유보소득 = (유보소득 + 잉여금처분배당) × 50%와 불입자본금 × 10% 중 큰 금액
3. 과세방법 : 배당간주금액 × 배당소득원천징수세율 (=총 15.4%)를 결산확정일 기준으로 원천징수함.
4. 배당귀속자(대주주)의 다음연도 종합소득합산금액에 포함하되, 실제 현금 배당년도에는 과세하지 않음(이중과세배제)
5. 과세하는 규정신설의 적합성 여부 판단

적합한 이유	부적합 이유
① 개인사업자와의 과세형평 ② 동일사업자 창출소득에 대해 같은 과세 ③ 실제배당유도를 통한 자금회전 · 소비촉진의 정책적 이유 ④ 단일소득을 경영자급여와 향후 배당과세로 구분하지 않음	① 미실현 · 미지급 소득에 과세 ② 잉여금은 설비투자, 재고자산으로 기업규모 키우기에 투입됨 : 차입경영압박 ③ 잉여금이 여러 자산으로 분산 잠기므로 실제 현금배당이 쉽지 않음 ④ 법인경영진의 급여, 연봉으로 이미 과세됨 (초과액은 법인의 synergy effect 이익임)

(안세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제공)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 · 경리 · 세무 · 재무 · 인사 · 노무 · 총무 · 법무 · 기획 · 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 · 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 · 보육 · 지원센터

안건조세정보
02-829-7575

주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480 호 / 주간 34호

2020. 8. 19. (수)

· 발 행 인 : 이 윤 연
· 제 작 : (주) 안건조세정보
· 대표전화 : (02) 829-7575
FAX : (02) 718-8565

목 차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02) 829-7575
팩스:(02) 718-8565
- 부산·경남
전화:(051) 642-3988
팩스:(051) 642-3989
- 대구·경북
전화:(053) 654-9761
팩스:(053) 627-1630
- 대전·충청
전화:(010) 3409-2427
팩스:(042) 526-1686
- 수원·안산
전화:(010) 5255-6116

-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198993-13-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안세 Taxpark의 차별화 특장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지원
- ⑩ 세무·회계·재경교론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개인유사법인의 초과유보소득을 배당금으로 간주하여 원천징수하고 종합소득합산하는 세법개정안의 적합성 분석	표지
긴 급 시 사 해 설	90세 장수 부모의 아파트 시세 12.5억(원가6억), 금융부채 2.5억의 증여세와 상속세 간략 비교	2
C E O 에 세 이	고객실수라도 애프터 서비스 철저히	3
세 무 · 회 계 상 담 자 문 (남들은 무슨 고민할까?)	-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시에는 시가로 인정되는 이율, 요율로 거래해야 문 제가 되지 아니함 - 특수관계있는 해외법인과 거래시 공정가격(시가)로 거래해야 세무상 문제가 되지 아니함 - 퇴직금 직접지급액과 연금계좌이체액이 있는 경우 모두 합산하여 퇴직 소득세액 계산후, 과세이연부분에 대해서는 이연퇴직소득세액에 기재 하여 신고함 - 수출단가 변경시 변경계약서사본과 인보이스가 증빙이 됨	5 6
눈 에 맞 는 절 세 미 인	복리후생목적으로 구입한 콘도회원권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함	7
매 일 절 세 세 무 요 점	- 부가세 일반과세와 간이과세 비교 - 2020년 하반기 달라지는 금융재정	9 10
직 장 인 Survival	보여지는 대로 평가받는다	11
최 신 판 례 예 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주식등'에는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전환사채는 포함되지 않으며, '자산총액' 및 '주식등의 가액'은 장부가액에 유보를 가감한 세무계산 상 장부가액을 의미 (서면법령재산-3663, 2019.12.26) - 2016.2.5.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이 2019.1.1.이 속하는 각 과세연도까지 2016.2.5.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전 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규정 부칙 제22조에 따른 소기업으 로 봄 (사전법령법인-152, 2019.12.26)	12 13
세 정 뉴 스 와 해 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꼭 챙기세요" ... 납부 연장기간 8월 31일 종료	14
마케팅 Tax consulting	순자산가치로 비상장법인의 주당가격 주식 평가시 전환권은 행사하 지 않은 전환사채는 아직 주식 등에 포함안됨	12
세 무 정 보	- 지방세 지원강화로 지역경제 재도약을 뒷받침한다 - 다주택 취득자 등 부동산 거래관련 탈세혐의자 413명 세무조사 착수 - 다수의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 탈세혐의자 세무조사	15 31 41
회 계 정 보	- 코로나19로 인한 반기보고서 등 제출지연 관련 제재면제	46
노 무 정 보	- 고용노동부, 2021년 최저임금 시간급 8,720원으로 고시	48
세 무 환 율 정 보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 재정환율	47

90세 장수 부모의 아파트 시세 12.5억(원가6억), 금융부채 전세금 등 2.5억의 증여세와 상속세 간략 비교



박윤중 공인회계사 (안세회계법인 대표이사)

- (전)한국외대 경영대학 겸임교수, (전)국민대 경영대 겸임교수
- 공인회계사 · 경영학박사(마케팅조세전략, 경영학원론)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와 서울대 경영대학원 졸업
- 다수우량기업 회계 · 세무고문(SK증권, 지오다노, 동서그룹 등)

기업승계·증여·상속자문
기업경영권 양도 컨설팅
(829-7575)

- 선증여시(자녀2인, 배우자 먼저 사망해 없음) $12.5\text{억} - \text{부채 } 2.5\text{억} = 10\text{억원}$
 - 자녀 증여인 경우 $10\text{억} \div 2\text{인} = 5\text{억} - 5\text{천만원(자녀공제)} = 4.5\text{억원(증여세 과세표준)}$
 $1\text{인 증여세} = 1\text{억원} \times 10\% + 3.5\text{억원} \times 20\% = 8\text{천만원}$
 - 부채(전세금) 2.5억원은 양도임 : 양도가액 $2.5\text{억} \div 2\text{인} = \text{각 } 1.25\text{억원}$
 - 취득원가 : $6\text{억} \times (2.5 \div 12.5) \div 2\text{인} = \text{각 } 6\text{천만원}$
 - 양도이익 $1.25\text{억} - 0.6\text{억} - \text{취등록세 } 0.05 = \text{각 } 6\text{천만원}$
 - 양도세 = $1200\text{만원} \times 6\% + 3400\text{만원} \times 15\% + 1400\text{만원} \times 24\%$
 $= 72\text{만원} + 510\text{만원} + 336\text{만원} = 918\text{만원} \times 1.1 = \text{각 } 1009.8\text{만원}$
 - 총세금 = (증여세+양도세) $\times 2\text{인} = (8\text{천만원} + 1\text{천만원}) \times 2\text{명} = 1.8\text{억원}$
- 상속인 경우 $12.5\text{억원} - 2.5\text{억원} = 10\text{억원(주택상속재산의 과세표준)}$
 - 자녀 등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공제는 없음
 - 과표 = $10\text{억원} - 5\text{억원} = 5\text{억원}$
 - 상속세는 = $1\text{억원} \times 10\% + 4\text{억원} \times 20\% = 9\text{천만원}$
- 선증여후 10년내 사망 상속인 경우 : 선증여금액 합산됨 : 상속세 9천만원에 비해 증여세 등 1.8억원이 더 크므로 추가 상속세는 안냄. 단, 차액 증여세금 반환은 없음.
- 결론 : 현 시세대로라면 선증여 세금이 많고, 연로함으로 인해 사망상속으로 가는 것이 세금부담 적음(그러나 향후 시세가 오를 수 있음을 감안하면 선증여가 바람직할 수도 있음).

고객실수라도 애프터 서비스 철저히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검임)한국팔기회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 윤윤수 (Fila코리아 회장), 이해익 공동칼럼

한국에서 자동차를 수출 할 때 제일 중요시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애프터서비스에 관한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신속하고 친절한 애프터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충분한 네트워크가 우선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정품의 부품이 신속하게 공급되고 동시에 정비되어야 한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제품을 산 고객의 사후 요구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떻게 하든 팔아 치우기만 하는 게 능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국내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애프터서비스가 경쟁사에 비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전쟁에서 지는 것이 아닌가. 제품은 아무리 그럴싸해도 부품이 늘 부족하게 공급되고 또 비싸다면 소비자에게 외면 당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하다.

이런 점이 중고차 가격에도 극명하게 반영되고 있다. 국내의 가전제품의 애프터서비스는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다. 품질도 품질이려니와 외제에 비하여 애프터서비스가 신속하고 저렴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는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다.

이만큼 마케팅에 있어서 애프터서비스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모든 제품이 완벽하게 고객들을 만족시킬 수 없다. 옷이든 신발이든 무슨 제품이든 만드는 데 있어서 모두 사람 손이 따르게 마련이다. 사람이 하는 일에 실수가 없을 수 없고, 100% 완벽할 수가 없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품질에 문제가 있는 제품이 있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제품을 고객에게 어떻게 처리해 주는가 하는 것이다.

애프터서비스는 신속함이 최우선이다. Fila 코리아의 목표는 3일내 완벽한 처리다. 고객이 불만족스러운 제품을 가져오면 수선이든 교환이든 사흘 내에 다시 마무리해서 고객에게 직접 가져다주는 것이 목표다. 말이 쉽지 3일 내에 고객에게 까지 직접 갖다 주는 것은 정말 빨리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빨리 처리해서 보내주는 것만으로도 고객의 상한 마음을 달

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그래서 작은 성의 표시를 따로 하고 있다. 제품을 고쳐 보낼 때 “그런 제품이 생겨 죄송하다” 는 뜻을 담은 간곡한 편지와 함께 자그마한 선물을 보낸다. 선물이라고 해야 열쇠고리나 볼펜 정도다. 하지만 이런 작은 성의로도 고객의 마음을 어느 정도 달래 줄 수 있다. 실수로 그런 잘못된 제품이 만들어 졌을 뿐, 우리 전체 제품은 그렇지 않다는 걸 간접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계기도 되는 것이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Fila코리아는 고객을 위해 또 하나의 제도를 만들었다. 그것은 고객의 과실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보상을 해준다는 것이다. 가끔 메이커 측 잘못이 아니라 고객이 물건을 사간 후 실수로 제품에 손상을 입히는 경우가 있다. 이런 때에도 전적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교환 또는 보상을 해주는 제도를 과감히 도입했다. 물론 전에는 고객의 과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가끔씩 고객 스스로가 잘못해놓고도 매장에 와서 억지를 쓰며 싸우는 일이 발생했다.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한다는 얘기를 듣고 필자가 단안을 내렸다.

"회사의 더 큰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책임져 주자, 애프터서비스 적용 범위를 넓히자"고. 따라서 고객들은 Fila제품에 대해서는 정말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다. 설사 고객의 잘못일지라도 교환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더 안전한 선택은 있을 수 없다. 이만큼 고객을 위한 노력과 서비스, 즉 봉사가 당연한 미래 경영의 한 징표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시에는 시가로 인정되는 이율, 요율로 거래해야 문제가 되지 아니함

Q 특수관계법인에 고정자산을 매각하고, 그대금을 1년 이상 길게 회수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평균회수기간 2월은 넘어서 세무상 대여금으로 해야한다고 하는데..
관련 세법규정좀 회신바랍니다.

A 특수관계자에게 자산 매각하고 그 대금을 장기간에 걸쳐 회수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 6호에 규정된 금전 등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 등으로 제공받은 경우로 인정되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회수기간이 특정기간 이상이면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거래를 제3자간에 체결된 계약 등과 비교해 법인이 자신의 이익을 축소시키는 계약 등을 체결하여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특수관계있는 해외법인과 거래시 공정가격(시가)로 거래해야 세무상 문제가 되지 아니함

Q 중국 합자회사 관련 당사에서 51%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이 회사에 출장을 가거나, 기계를 봐주러 가거나 컨설팅을 가게 되면
당사 비용으로 처리할지 아니면 미수금으로 처리할지요?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중국법인에게 귀사가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정당한 대가를 받으면서 거래를 해야 문제가 되지 않으며, 특수관계가 있는 해외법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면서 공정가격(시가)으로 거래하지 않으면 세무상 문제가 발생됩니다.

퇴직금 직접지급액과 연금계좌이체액이 있는 경우 모두 합산하여 퇴직소득세액 계산후, 과세이연부분에 대해서는 이연퇴직소득세액에 기재하여 신고함

- Q** 명예퇴직자 정보 : 2003.5.2 입사, 퇴직금중간정산일 : 2009.4.1, 퇴사일 : 2020.6.4
(1번) 명예퇴직금 : 41,369,895원(당사규정산출방법)
(2번) 퇴직연금(DC)의 명퇴자 IPR계좌로 이체금액 : 1억원 이상 예상
당사 입장에서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역할과 책무 관련 문의입니다.
1. 노무사의견 : 명퇴금만 퇴직소득으로 넣어서 퇴직소득세/주민세 산출 하면 안되며,
DC 운영사에 2번 금액에 대한 원징을 받은 후 퇴직소득액에 합산하여 과세 후 퇴직
원징을 해야한다
 2. DC운영사 의견 : 세법상으로는 최종 수급하는 금융사에서 합산과세를 하므로, 당사
는 명퇴금에만 원징 후 DC 운영사에 퇴직신청을 함께 해주면 된다.
- 〈문의사항〉
DC운영사의 의견대로 할 경우 당사가 추후 세무상 받는 불이익(과징금등)은 없는지 운
영사 말대로 하는것이 세법상으로도 적합한지

- A** 세무상으로는 1과 2를 모두 합한 금액에 대해 퇴직소득세 계산한 후, 계산된 퇴직소득 세 신고대상세액에
서 과세이연(irp이체액)에 해당하는 퇴직소득세액은 이연퇴직소득세액에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즉, 1안이 타당합니다.

수출단가 변경시 변경계약서사본과 인보이스가 적격증빙임

- Q** 1/1 매출수량 10개 단가 10원으로 100원을 매출면장, 인보이스 발행하여 매출처리
6/10 위 1/1자 10개에 대해서 단가 20원으로 인상하여 수급예정시
준비해야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인보이스만 발행하면 되는지요?
부가세 직수출신고시 위 매출은 면장없이 신고만 하면 되는지요?

- A** 단가 변경된 경우 변경내용이 담긴 변경계약서와 인보이스가 있으면 되며, 단가변경에 따른 추가 금액이
므로 면장없이 변경계약서 등을 근거로 영세율매출 신고반영하면 됩니다.

복리후생목적으로 구입한 콘도회원권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함

상담실 백종훈 차장

과세사업을 하는 회사가 임직원의 복리후생목적으로 콘도회원권을 구입하는 경우, 그 구입과 유지에 관련된 부가가치세액에 대해서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될까?

부가가치세법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매입세액만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접대를 위한 목적이 아닌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목적으로 콘도회원권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종업원 복리후생목적 콘도회원권은 업무용 자산으로 봄

콘도미니엄이란 원래 1950년대 이탈리아의 중소기업들이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공동으로 휴양용 별장을 건설, 운영해 온 것이 그 시초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대로라면 법인의 콘도이용권구입은 종업원 복리후생목적이 당연해 보인다.

그러나 오늘날 콘도의 의미는 호텔과 별장의 장점을 갖춘 관광숙박시설로, 특히 접대문화가 발달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콘도회원권을 접대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는 경우도 많기에 언뜻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받기가 어렵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회사가 콘도회원권을 구입한 경우 실제의 사용 사실 등을 파악하여 종업원의 복리후생목적으로 콘도를 구입·사용한 경우라면 업무에 관련된 자산으로 보도록 통지하고 있다.

또한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4호에서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면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를 소득세법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49조제3항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하고 있다.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 또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 아닌 회사 임직원은 제외)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건물 등의 유지비·수선비·사용료, 그 업무와 관련없

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지출로 보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다른 사람에는 주주(소액주주제외) 아닌 회사의 임직원은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회사의 임직원을 위한 복리후생차원의 콘도회원권이라면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과세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가 진지하게 임직원의 복리후생목적으로 콘도회원권을 구입하였다면 그 구입관련지출비용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또한 이후 이용비용 및 연회비 등 해당액에 대한 매입부가세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물론 회사가 과연 진실로 복리후생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느냐는 사실판단 할 사항이다.

♣ 법인46012 - 3030, 1997. 11. 26

콘도미니엄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으로 법인세법상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으로 보는 것이나, 콘도미니엄을 종업원의 복리후생목적으로 법인이 취득 또는 사용하였을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에 규정한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종업원의 복리후생목적으로 취득 또는 사용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22601 - 1411, 1986. 04. 30

종업원의 복리후생용으로 취득 또는 임차하여 당해 목적에 사용하는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취득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제비용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종업원의 복리후생용으로서의 사용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부가1265.1 - 3285, 1981. 12. 16)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것이므로,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한국 콘도미니엄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종업원 복리후생목적 콘도회원권은 업무용 자산으로 봄

복리후생 목적으로 콘도미니엄을 취득한 경우의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하지만, 해당 콘도미니엄을 특정 임원들에 대해서만 사용하게 한다거나 또는 접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있는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 부가1265.2 - 275, 1982. 1. 29

개인사업자가 손님을 접대하기 위하여 콘도미니엄을 매입한 것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부가세 일반과세와 간이과세 비교

분류	과세 방식	과세기간
일반과세	실제 매출액 - 매입액(비용)을 계산 → 10% 부과	6개월 단위
간이과세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5~30%)을 적용해 가상 수익을 계산 → 10% 부과	1년 단위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른 세제지원 보완 조치

구분	내용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임대 등록기간 내 세제혜택 유지(소급적용 제외)
	자진 · 자동 등록말소시에도 추징 면제
양도소득세	의무임대기간 1/2이상 임대하고 1년 내 매각 시 양도세 중과 배제
	임대사업자 거주 주택은 5년내 매각시 중과배제
제외조건	7월 11일 이후 등록분에 대해선 세제지원 적용 배제



2020년 하반기 달라지는 금융재정

기획재정부	<p>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용자동차 구매 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30% 인하
국세청	<p>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 매출(공급가액) 8천만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2020년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
금융위원회	<p>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포통장 관련 범죄 처벌 강화(8월 20일 시행) • 금융회사 등이 ATM고장 등으로 이용자의 접근매체 획득시 본인 확인의 법적 근거 마련(전자금융거래법) • 피해금 환급과 관계없이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의 전과가 있는 자의 전자금융 거래를 제한 · 일정금액 이하는 채권소멸절차 미개시(통신사기피해환급법)



'소재 · 부품 · 장비 2.0' 주요 내용

글로벌 소부장 강국 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VC재편 대응형 소부장 관리품목을 338개+α로 확장 • 소부장 핵심기술 및 바이오 · 시스템반도체 · 미래차(Big3) 등 차세대 전략기술에 2022년까지 5조원 이상 투자 • 소부장 으뜸기업 100개, 강소기업 100개 육성
첨단산업의 세 계공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산업, 유턴 포함 100여개 핵심기업 유치 • 스마트화, 공정자동화, 금융지원 등 전방위 지원 • 첨단산업 유치 · 유턴 보조금, 인프라 등에 5년간 1조5000억원 지원 • 첨단분야에 대한 현금지원 한도 10%포인트 상향
범부처 · 민관 지원체계 가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 전자산업계의 유턴 • 해외첨단기업의 R&D센터 유치 • 해외 첨단기업과 국내기업간 기술협력



보여지는 대로 평가받는다

애플은 '다르게 생각하라(Think different)'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제품 뿐만 아니라 포장, 판매 영업점 등 조직 전체가 일관된 활동을 하고 있다. 애플 매장은 다른 전자제품이나 컴퓨터 매장과 달리 깔끔한 분위기와 열린 구조에서 언제든지 고객의 질문에 답을 해줄 직원까지, 매장 내 모든 요소가 애플의 슬로건인 'Think different'를 잘 보여주고 있다. 애플 본사도 카페테리아에 있는 스무디 바, 원목바닥, 애견의 사무실 출입을 허락하는 정책 등 모든 것에서 'Think different'를 실천하고 있다. 애플사와 같이 브랜드 환경을 관리하는 회사들은 자신만의 독특한 가치를 강화하는 활동을 일관되게 실행하고 있다.

기업과 같이 개인도 자신의 브랜드 환경에 속하는 브랜드 메시지를 관리해야 한다. 기업으로서 실력도 중요하지만, 입는 옷, 말하는 방식, 헤어스타일, 태도, 만나는 장소 등 행동 하나하나가 브랜드 메시지가 됨을 인식하고 자신만의 독특한 가치를 전달해야 하는 것이다. 복잡하고 만만치 않은 인간관계에서 외부로 표현되는 메시지는 퍼스널 브랜딩에서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이미지는 시각적인 요소로 만들어지는 주관적인 느낌이라고 할 수 있고 이는 마음가짐과 정신, 성품, 가치관 등을 포함하는 내적 이미지와 외모, 스타일, 언행, 자세, 패션, 습관화된 태도 등을 나타내는 외적 이미지로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이미지는 외적인 부분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외적 이미지는 자신의 노력과 타인의 도움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부분이지만, 내적 이미지는 타인에 의해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람을 외적인 것으로만 판단하는 것은 도덕적인 관점에서는 옳바르지 않지만,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 좋은 제품을 만들어 놓고 포장이나 광고를 하지 않고 고객이 제품의 진가를 알아보고 구매하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외적이미지는 내적이미지의 또 다른 표현이 된다. 1인기업으로써 뛰어난 실력과 성실함, 결과 도출 능력 등을 갖추었다라도 상대방이 알 수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내적 능력이 평가되기 까지는 외적 이미지가 나의 평가 요인이 될 수 밖에 없다.

최신 판례예규

Marketing Tax consulting

순자산가치로 비상장법인의 주당가격 주식 평가시 전환권은 행사하지 않은 전환사채는 아직 주식 등에 포함안됨

‘주식등’에는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전환사채는 포함되지 않으며, ‘자산총액’ 및 ‘주식등의 가액’은 장부가액에 유보를 가감한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의미

서면법령재산-3663, 2019.12.26

질 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4항제5호를 적용 시
 - － (질의1) ‘주식등’에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전환사채가 포함되는지 여부
 - － (질의2) 자산총액 및 주식등 가액의 산정방법

회 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4항제5호에 따라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제5호의 ‘주식등’에는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전환사채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법인의 자산총액 및 주식등의 가액은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르고, ‘법인의 장부가액’이란 해당 법인이 「법인세법」제112조에 따라 기장한 장부가액에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자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가감한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과세대상 사업소득으로 열거한 소득법 § 19①(16)의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하는 것이나 해당 소득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사회복지사업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법령소득-639, 2019.12.31

질 의

- 질의자는 발달장애아동의 발달 재활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 － 교육서비스업으로 사업자등록 하여 발달장애아동에 대해서는 발달재활서비스를 공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바우처 제도를 통해 대가를 일부 지급받거나, 장애아동 부모 등으로부터 100% 대가를 지급받기도 함

질의내용

- 교육서비스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발달장애아동에 대해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바우처 소득 등을 제공받는 경우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 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의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16호에 따라 과세대상의 사업소득인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해당 소득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016.2.5.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이 2019.1.1.이 속하는 각 과세연도까지 2016.2.5.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전 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규정 부칙 제22조에 따른 소기업으로 봄

사전법령법인-152, 2019.12.26

【 질 의 】

- 종전규정 적용 시 '15~'16사업연도는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개정규정 적용 시 '15~'18사업연도는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부칙 규정에 따라 '18사업연도를 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경과조치의 적용대상 소기업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51, 2019. 12. 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51, 2019.12.24.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이 속하는 직전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 규정')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별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규정')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전 규정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규정 부칙 제22조(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른 소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매출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에 따른 과세제외매출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서면상속증여-2895, 2020.01.20

【 질 의 】

사실관계

- 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① 특수관계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30%)의 2/3을 초과(20%)하고, ②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질의내용

-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1천억원 초과 여부 판정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에 따른 과세제외 매출액을 제외하는지 여부

(갑설) 특수관계법인 매출액 1천억 초과 여부 산정시, 과세제외 매출액을 차감한 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초과여부를 판단한다.

(을설) 과세제외 매출액은 고려하지 않는다.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매출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에 따른 과세제외매출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꼭 챙기세요”... 납부 연장기간 8월 31일 종료

정부는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세정지원 차원에서 업종이나 지역 구분 없이 모든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8월 31까지로 3개월 늦춰줬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급감했거나, 피해가 심한 납세자에게는 신고기한도 3개월 연장해줬다.

국세청은 올해 처음 신고하는 주택임대 분리과세 소득을 위해 전용신고 화면, 종합·분리과세 세액비교 서비스도 제공했다.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세율 14%)와 종합과세(세율 6~42%) 중 선택해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종합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올해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 기한도 8월 말 까지 연장했다. 개인지방 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세와 같고, 세율은 0.6~4.2%로 종합소득세의 10분의 1 수준이다.

만약 종합소득세를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체납된 세액에 대해 매일 0.025%가 납부성실가산세로 부과된다. 연으로 환산하면 9%가 넘는 금액이다.

단,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각종 세정 지원을 실시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방세도 ‘외국납부세액공제’ 허용... 2014년 이후 분부터 돌려준다

정부가 지방세에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전면허용한다. 이중과세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이러한 내용의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국세인 법인세에서는 외국에서 현지 납부한 세금은 소득으로 보지 않고 공제처리한다. 이미 납부한 세금에 두 번 물리는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지방세인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고려하지 않고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을 사용해 과세하는 문제가 있었다.

행안부는 외국 납부 세금을 국외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보고,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기로 하고, 지방세법 개정안 부칙을 통해 2014년 이후 외국납부세액 소급 환급해주시기로 했다.

해당 지방세 관계 법률 개정안은 12일부터 31일까지 입법 예고 뒤 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말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지방세 관계법을 개정으로 코로나19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고 어려운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권익 향상을 위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납세자 중심의 세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액상형 전자담배 세금 두 배↑... 가격 인상 임박

행정안전부는 11일 '2020년 지방세 4개 관계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계획을 밝혔다.

기존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이 니코틴 용액 1ml 당 628원에서 1256원으로, 지방교육세는 221원에서 443원으로 인상한다.

현행 궤련형 담배 한 갑 기준 부과되는 세금은 3318원으로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 0.8ml 기준 1850원으로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에 가격을 조정하면 액상형에 붙은 세금은 3295원으로 궤련형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간다.

니코틴 원료를 줄거나 뿌리에서 추출한 경우에도 동일한 세금을 부과한다. 과거에는 앞에서 추출한 니코틴 용액에만 세금을 부과했지만, 동일한 원료라면 추출 재료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미리 재고를 쌓아둔 후 세금 인상 후 팔아치워 재고차익을 누리는 것을 막기 위해 재고차익 방지규정을 명확화했다.

세율 변경 전 이미 담배소비세를 납부한 재고담배는 해당 체계에서 판매해야 하며, 인상된 세율로 팔았을 때는 차액을 기준으로 추가 과세 또는 환급조치한다.

지방세 지원강화로 지역경제 재도약을 뒷받침한다

- 행정안전부, 2020. 8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코로나19와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12일(수) 입법예고 한다.
 - * 4개 법률 :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 이번 예고안에는 지난 7월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국세세법*개정안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 * 국세 동반개정 사항 : 「지방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개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등
-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피해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 안전망을 재정비하고, 과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지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마련됐다.
- 개정안 주요내용은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지역경제 재도약 지원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및 공정사회 구현 ▲과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권익보호 등이다.

①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지역경제 재도약 지원

- 먼저, 농·수산업의 소비급감과 경제여건 악화가 지속됨에 따라 농·어업 분야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이 3년 연장되고, 중소기업 지원 분야 감면과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도 일괄 연장한다.
-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선도형 경제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신성장과 친환경 관련 기술인 "디지털·그린 뉴딜"사업에 대한 지방세 세제혜택이 강화된다.
 - 5G(5세대) 무선국 등록면허세 감면이 신설되고, R&D(연구개발) 차량의 취득세율을 명확히 하여 연구와 개발을 적극 지원한다.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 대한 지원도 새롭게 마련된다.
- 행안부는 신사업 구축 → 연구개발 지원 →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지방세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②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및 공정사회 구현

-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3년 연장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도 연장된다.
-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채납자에 대한 관리는 더욱 강화된다. 채납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지방세의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체납 발생 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부터는 유치장 등에 감치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 또한, 전국 분산 고액채납자에 대한 합산 제재근거를 마련하여 전국 체납액을 합산하여 제재기준 금액을 넘는 체납자는 제재할 수 있도록 한다. 예컨대, 서울에 8백만 원, 부산에 4백만 원의 지방세 체납자의 경우 명단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합산 제재 근거가 마련되면, 전국 합산 1천만 원 이상의 체납 시 명단공개가 가능해진다.
 - 아울러 고액·상습 채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와 매각 권한을 세관장에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수입품 통관단계에서 압류·매각할 수 있도록 한다.
 - 이와 함께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범위를 확대하고, 담배소비세 세율 변경 시 재고차익 방지 규정을 신설한다.

③ 과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권익보호

- 마지막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 제도를 개선하고, 고급 이륜자동차에 대한 세부담을 합리화하며, 액상형 전자담배 담배소비세 세율도 조정한다.
 - 현재, 세액공제가 없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을 사용하고 있어, 외국에 납부한 세액에도 과세하는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외국납부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이러한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 또한, 장기간 단일세율 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이륜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차종 배기량 기준으로 세액을 설정한다.
 - 아울러 담배 간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당 628원에서 1,256원으로 조정한다.
- 또한, 납세편의를 위해 주민세 과세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도 '납부지연가산세'로 일원화한다.
 - 균등분(개인·개인사업자·법인), 재산분, 종업원분 등 사실상 5개로 구성된 주민세의 종류를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개로 대폭 단순화하여 납부해야 할 주민세의 종류를 간소화했다. 또한, 주민세 납기 기간도 7월과 8월에서 8월*로 통일한다.
 - * 현재 7월 재산분, 8월 균등분 → 8월로 통일(개인분, 사업소분)
 - 납세자가 세무조사결과통지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결과를 20일 이내에 통보해야하는 규정

도 마련했다.

- 이번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은 오는 8월 12일부터 8월 31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다시 한 번,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말까지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관계법률 개정으로 코로나19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고, 어려운 지역경제가 신속히 복원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역경제가 재도약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권익 향상을 위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납세자 중심의 세정을 구현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 지방세 관계법률 주요 개정내용

1.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지역경제 재도약 지원

코로나19 피해극복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업분야 감면연장 및 재설계 • 중소기업 지원분야 감면 일괄 연장 •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 일괄 연장
지역경제 재도약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G 무선국 등록면허세 감면 신설 • R&D차량 등 미등록 차량 취득세율 명확화 •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직업훈련시설 지원

2.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및 공정사회 구현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시설 감면 연장 • 노인복지시설 감면 연장 • 국가유공자 대상 감면 일괄 연장
공정사회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화생활 상습·고액 체납자 관리 강화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범위 확대 • 담배소비세 세율 변경 시 재고차익 방지규정 명확화



3. 과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권익 보호

과세제도 합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 제도 개선 • 고급 이륜자동차에 대한 세부담 합리화 •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세율 합리화
납세자 권익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세자 중심의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 납세편의 제고를 위한 가산세·가산금 일원화 • 세무조사 등의 결과통지 기간 명확화 및 합리화

1 코로나19 피해극복 지원

-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극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농어업 분야와 중소기업 지원 관련 감면을 연장·재설계하고,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을 일괄 연장한다.

① (연장·재설계) 농어업 분야 감면 연장 및 재설계 : 1,393억원

- － 코로나19에 따른 농·수산업 소비 급감 등 경제여건 악화 추세를 고려하여 농·어업 분야의 감면 연장 및 재설계

※ 자경농민, 농·어업법인, 임업 후계자 등 11건

구분		현행	개정
자경농민	농지·임야 농업용 시설	취득세 50%	⇒ 감면 연장 (3년)
농업법인	설립 2년내 취득	취득세 75%	
농·어업법인	영농·유통·가공 목적	취득세·재산세 50%	

② (연장) 중소기업 지원 분야 감면 일괄 연장 : 56억원

- －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된 점을 고려, 중소기업 관련 지방세 감면은 현행 감면을 연장

※ 벤처기업집적시설, 창업보육센터, 신기술창업집적지역 등 11건

구분		현 행	개 정
벤처기업 집적시설 창업 보육센터	시행자	취득세·재산세 50%	⇒ 감면 연장 (3년)
	입주기업	취득세·재산세 등 중과배제	
	시행자	취득세 75%, 재산세 50%	
	학교 외 학교	취득세 75%, 재산세 100%	
		입주기업	취득세·재산세 등 중과배제

③ (연장)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 일괄 연장 : 약 1.4조원

-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소상공인 등) 지원 및 내수 활성화를 위해 현행 수준*으로 1년 연장

* 소득세 세액공제·감면액의 10%를 일괄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

④ (연장) 서민금융기관 감면 연장 : 500억원

- 산지유통 등 농·어업인 사업의 지속 지원을 위해 감면 연장

구분		현 행	개 정
농협·수협· 산림조합	구매·판매사업	취득세·재산세 25%	⇒ 감면 연장 (3년)
	고유업무	취득세·재산세 100%	
신협· 새마을금고	신용사업, 복지·교육사업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최소납부세제) 감면액이 취득세 200만원·재산세 50만원 이상인 경우 감면액의 15% 부과

⑤ (연장·재설계) 창업중소기업 감면 연장 및 재설계 : 767억원

- 창업 초기 이익을 유보하여 기업의 조기안정과 지속적인 성장을 유인하도록 창업중소기업의 감면 연장 및 재설계

※ 창업요건 명확화, 감면이 인정되는 창업업종 확대 및 분류체계 정비

구분	현 행	개 정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취득세 75% 재산세 100%(3년), 50%(2년) 등록면허세 100%	⇒ 감면 연장 (3년) * 등록면허세 감면 제외



2 포스트 코로나 대비 지역경제 재도약 지원

-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선도형 경제 기반을 구축하고 "디지털·그린 뉴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성장 및 친환경 관련 기술에 대한 지방세 세제혜택을 강화한다.

① (신설) 5G 무선국 등록면허세 감면 신설 : 20억원

- － 4차 산업혁명 기반 마련을 위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5G 무선국 신규 구축 시 등록면허세 50% 감면 신설

구분	현 행	개 정
5G 무선국 (과밀억제권역 외)	〈 신 설 〉	등록면허세 50%

② R&D차량 등 미등록 차량 취득세율 명확화

- － 실험·연구용 차량 등*의 취득세율 명확화(2%)로 연구·개발 지원

*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개발용 차량, 자율주행 연구·개발용 차량, 전기차 등 친환경·첨단미래형 자동차의 개발·보급용 차량 등

구분	현 행	개 정
비영업용 차량의 취득세율	(승 용 차) 7% (경 차) 4% (화 물 차) 5% (미등록 차량) 4~7%(상동)	〈좌 동〉 (미등록 차량) 2%

③ (신설)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직업훈련시설 지원 : 26억원

- －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촉진 및 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공공 직업훈련시설의 취득세·재산세(50%) 감면 신설

구분	현 행	개 정
공공직업훈련시설	〈 신 설 〉	취득세·재산세 50%

3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 지역이동센터, 노인복지시설 등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시설에 대한 감면 연장과 국가유공자 대상 감면 일괄 연장 등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지역사회 안전망을 더욱 강화한다.

- ① (연장)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시설 관련 감면 연장 : 9억원
 -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복지 제공, 취약계층 여성의 사회참여 유도
 등을 위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연장

구분	현 행	개 정
지역아동센터	취득세·재산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감면 연장 (3년)
청소년단체	취득세 75%, 재산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청소년수련시설	취득세 100%, 재산세 5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② (연장) 노인복지시설 감면 연장 : 341억원
 - 노인복지 인력·시설 등 투자 지원을 위한 감면 연장

구분	현 행	개 정
무료시설	취득세 100%, 재산세 50%	감면 연장 (3년)
일반 경로당	취득세·재산세 등 100%	
유료시설	취득세·재산세 25%	

- ③ (연장) 국가유공자 대상 감면 일괄 연장 : 58억원
 - 국가에 공헌한 국가유공자의 생계 안정 등을 위하여 감면 연장

구분	현 행	개 정
대부금 부동산 유공자 단체	취득세 100%	감면 연장 (3년)
	취득세·재산세 등 100%	
자활용사촌	취득세·재산세 등 100%	

4 조세정의 확립을 통한 공정사회 구현

- 체납징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호화생활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한 감치요청과 전국 분산 고액체납자에 대한 합산 제재의 근거 등을 마련하여 공정사회를 구현하고, 담배소비세 세율 조정 등으로 지역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한 지방세입 기반을 마련한다.

① 호화생활 상습·고액체납자 관리 강화

- 고액·상습체납자 감치요청 근거 마련

※ 국세 일치



-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법원 결정에 따라 30일 이내 유치장 등에 유치하는 감치제도 도입

※ (절차) [지자체 장] 지방세심의회 의결 → [검사] 감치 청구 → [법원] 최종감치여부 결정 → 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30일 이내 체납자 유치

< 감치신청 대상 >

- ①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 지방세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명단공개 기준, 국세 2억원 이상)
- ② 체납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민사집행법, 형사소송법, 법원조직법 등에서도 감치제도 규정

- 전국 분산 고액체납자에 대한 합산 제재 근거 마련

- 각 자치단체에 분산된 체납액을 합산하여 징수법상 제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의 실효성 확보

* (광역 내 합산 시)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기초지자체의 체납액을 합산하여 제재 수행(광역 간 합산 시) 광역 간 분산체납액 존재 시 체납액이 가장 많은 자치단체장이 합산 제재

구분	현행	개정
체납자 A씨 (총체납액 1천2백만원) 서울 8백만원 부산 4백만원	명단공개 불가 (지자체별 1천만원 이상 기준)	명단공개 가능 (전국 합산 1천만원 이상)

- 고액·상습체납자 수입품 체납처분 권한 위탁 ※ 국세 일치

- 고액·상습*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압류·매각) 권한을 세관장에 위탁하는 근거 마련

* 체납발생 1년 경과, 체납액 1천만원 이상(지방세징수법 § 11①)

구분	현행	개정
고액·상습체납자 체납징수 수단	수입품(동산)의 경우 통관단계 미압류시 체납처분 사각 발생	체납처분 위탁 근거 마련 ※ (지자체장 → 세관장) 고액·상습체납자 수입품 통관단계에서 압류 가능

- 명의신탁된 중증재산 물적납세의무 부여 규정 신설

- 중증에 체납발생 시 개인에게 명의신탁된 중증재산이 있을 경우 명의수탁자에게 물적납세의무 부여 근거 신설

※ 개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된 재산이더라도, 중증재산은 부동산에 대한 실권리자인 중증에게 납세의무 부여

- ②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범위 확대 ※ 국세 일치
-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사망보험금을 수령 시 납세의무 승계 규정 신설
 - ※ 상속포기로 납세의무 승계는 회피하면서,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은 수령하는 등 조세 회피 사례 발생
- ③ 담배소비세 세율 변경 시 재고차익 방지규정 명확화
- 세율 변경 전 이미 담배소비세를 납부한 재고담배를 새로운 세율 체계 하에서 판매할 경우 차액을 기준으로 추가 과세 또는 환급
 - ※ 감사원은 '15.1.1. 담뱃세 인상에 따른 제조사의 재고차익 관리실태 감사 후 "담뱃세율 인상 시 재고차익 환수를 위한 입법대책 미비" 지적

5 불합리한 과세제도 합리화

-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 제도를 개선하며, 고급이륜차의 세부담을 합리화하는 등 과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 ①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 제도 개선
- (현행) 세액공제가 없는 법인지방소득세가 법인세와 과세표준을 공유함에 따라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소득에 포함시켜 과세하는 문제
 - ⇒ (개정) 외국납부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
 - ※ 납부한 세금을 소득으로 산입하여 과세하는 불합리 해소(대법원 판례에 부합)

〈 과년도 외국납부세액 환급처리 방향 〉

- ▶ 지방세법 개정안 부칙에 '14년 이후 외국납부세액 소급 환급 근거 마련
- ▶ 법 시행 전이라도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 환급처리 관련 지침에 따라 신속히 환급하도록 각 지자체에 안내 예정(8월 중순)

- ② 고급 이륜자동차에 대한 세부담 합리화
- (현행) 고가·고성능 이륜 승용자동차 보급이 확대*되었으나, 장기간 단일세율 체계 유지로 과세 불형평** 발생
 - * 대형이륜차(260cc초과) : '93)1만대 → '00)3만대 → '10)4만대 → '15)7만대 → '19)11만대
 - ** 예시 : 할리데이비슨 1,923cc(7,200만원), 대림 247cc(499만원) 동일 세율(1.8만원) 적용
 - ⇒ (개정) 「자동차관리법」 차종 분류에 따라 세율구간을 신설하되, 승용차 대비 평균 가격* 및 고속도로 이용규제 현황 고려 세액 설정
 - * 시가표준액 기준 : (승용차) 4,053만원, (이륜차) 1,418만원



구분	현 행	개 정
영업용	3,300원	<div> <div>배기량</div> <div>세액</div> </div> <div> <div>125cc 초과 260cc 이하</div> <div>18,000원</div> </div> <div> <div>260cc 초과 1,000cc 이하</div> <div>36,000원</div> </div> <div> <div>1,000cc 초과</div> <div>54,000원</div> </div> <div> <div>그 밖의 3륜 이하 소형자동차</div> <div>18,000원</div> </div>
비영업용	18,000원	

③ 액상형 전자담배 담배소비세 세율 조정

- 담배 간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세율을 니코틴 용액 1ml당 628원 → 1,256원으로 조정

구분	현 행	개 정
액상형 전자담배	<div>니코틴 용액1ml당 628원*</div> <div>* 1.6ml당 1,007원</div> <div>※ 껍질담배 1갑(20개비)당 1,007원</div>	<div>니코틴 용액1ml당 1,256원*</div> <div>* 0.8ml당 1,007원</div>

6 납세자 권익 보호 및 납세편의 제고

- 주민세 과세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가산세·가산금을 일원화하며, 세무조사 절차를 명확화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과 편의를 제고한다.

① 납세자 중심의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 사실상 5개로 구성된 현행 세세목을 3개로 대폭 단순화*하고, 개별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주민세의 종류 간소화
 - * 균등분(개인·개인사업자·법인), 재산분, 종업원분 →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 또한, 주민세 납기를 8월로 통일*하고, 재산분의 명칭을 "사업소분"으로 명확화하여 납세편의 제고 및 납세수용성 제고
 - * 균등분8월, 재산분7월 → 개인분·사업소분8월

현 행			개 정		
구분	납세의무자	세율체계	구분	납세의무자	세율체계
균등분 (8월)	개인	1만원 内	개인분(8월)	〈좌 동〉	
	개인사업자	5만원	사업소분 (8월)	사업자	◦모든 사업자: 기본세액(5만원*) ◦연면적 330㎡ 초과: 기본세액+250원/㎡
	법인	5~50만원			
재산분 (7월)	사업자	연면적 330㎡초과 250원/㎡	종업원분	〈좌 동〉	
종업원분	사업자	월급여액×0.5%			

* 다만, 법인 기본세액은 자본금 규모에 따라 5~20만원 차등(기존 법인균등분 단순화)

② 납세편의 제고를 위한 가산세·가산금 일원화

-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구분	현 행	개 정
법정기한 불이행 시 가산세·가산금 부과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0.025%) 가산금 (1회 3%) 증가산금 (매월 0.75%)	납부지연가산세 ※ 납세자 세 부담 증가없이 통합하기 위해 산정방식 유지(일할+월할)

③ 세무조사 등의 결과통지 기간 명확화 및 합리화 ※ 국세 일치

-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보장을 위해 결과통지 기한(20일) 신설

구분	현 행	개 정
세무조사 결과통지	결과통지 기한 없음 ※ 다만, 지자체 규칙으로 세무 조사 결과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 통지	조사 종료 20일 이내 ※ 외국기관과 협의 등 사유 발생 시 해당 부분은 그 해소일 부터 20일 이내

다주택 취득자 등 부동산 거래관련 탈세혐의자 413명 세무조사 착수

- 국세청, 2020. 8

- (착수 배경) 국세청은 최근 수도권 및 일부 지방도시 주택시장의 과열현상에 편승한 부동산 거래관련 탈세혐의를 다수 발견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 (조사 대상) 1인 법인을 설립하거나, 수차례에 걸친 껍투자를 통해 다수의 주택 및 분양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자 등 다주택 보유자 56명 및 회사자금 유출 혐의 9개 법인과
 - 고액 자산 취득 연소자 등 62명, 편법증여 및 사업소득 탈루를 통한 고가 주택 취득자 44명, 고액전세입자 107명
 -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주택거래관련 탈세의심자료* 중 특수관계자 간 가장 차입금 등을 통한 탈세혐의자 100명
 - * 국토교통부 內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에서 조사하여 기 통보된 자료를 분석하여 선정하였으며 향후 통보될 탈세의심자료도 전수 분석 할 계획
 - 주택 매매거래 시 업·다운 계약서 작성혐의자, 수수료 누락 등 탈세 혐의 부동산 중개업자, 기획부동산 등 35명 등
 - 부동산 거래를 통한 변칙적 탈세혐의자를 정밀 분석하여 413명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 (향후 계획) 앞으로도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주시하고 탈세행위 발견시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하게 과세하겠습니다.
 - 특히, 서울·중부지방국세청에 이어 인천·대전지방국세청에도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추가로 설치하였으며,
 -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에 보다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계속 확대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 세무조사 착수 배경

- 국세청(청장 김현준)은 코로나19로 실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정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 악의적·지능적 탈세에 대하여는 세정역량을 집중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 최근 주택시장은 수도권과 지방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일명 '풍선효과'로 불리는 국지적 과열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 고가의 주택 매매 및 고액 전세 임차 과정에서 특수관계자 간 차입금을 가장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으로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는 등 편법증여 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에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 과열국면을 이용하여 변칙적 부동산 거래를 통해 조세를 탈루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2 그 간의 추진 경과

가. 조사 성과

- 그간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서울시, 경기도 등)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여
 -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세 탈루행위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검증을 강화해 왔습니다.
- 그 결과 '17년 8월 이후 부동산 거래·금융자산 등을 통한 변칙적 탈세혐의자 3,587명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 등을 강도 높게 실시하여 탈루세액 5,105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단위: 명, 억 원)

조사년도	기획조사 횟수	조사대상자	추징세액
'17년	3	843	1,428
'18년	4	1,385	2,970
'19년	2	481	491
'20년	2	878	216(일부 조사 중)
합계	11	3,587	5,105

- 또한,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부동산 거래관련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탈루세액을 추징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기관에 통보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나. 주요 탈루사례

- 최근 세무조사 결과, 적발된 주요 추정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무조사 주요 추정사례 (붙임 참고)

사례 ① 밀수출 대금을 환치기로 수령하여 고가 아파트 다수 취득

- ◆ 의류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가의 아파트를 다수 취득하여 조사한 결과, 상품을 밀 수출업자를 통해 중국에 판매하고, 대금은 환치기를 통해 국내 환전상으로부터 ATM기기를 이용해 받거나 외국인 으로부터 수시로 이체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종합소득세 추정

사례 ② 큰아버지를 통해 우회 증여하고 차입으로 위장하여 증여세 회피

- ◆ 20대가 고가주택 취득자금을 급여와 큰아버지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소명하여 조사한 결과, 아버지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가공의 급여를 받았으며, 아버지가 큰아버지에게 거액의 자금을 이체하고 이를 대여한 것으로 위장한 사실을 확인하고 증여세 및 아버지의 소득세 추정

사례 ③ 기업자금을 유출하여 사주일가의 고가 부동산 취득

- ◆ 일용직 인건비 과다 계상, 근무사실이 없는 배우자 및 자녀의 인건비를 허위 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불법 유출하고, 이를 통해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여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한 것을 확인하고 법인세와 소득세 추정

사례 ④ 현금으로 수취한 고액의 중개 수수료를 신고 누락

- ◆ 부동산 중개업자가 전·월세 중개수수료를 현금으로 수취하고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는 등 제세를 탈루하여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 추정

사례 ⑤ 미성년 자녀들에게 비 주거용 신축건물 지분 편법 증여

- ◆ 미성년자가 비주거용 건물의 지분을 취득하여 조사한 결과, 어머니가 토지를 매입하여 비주거용 건물을 신축하고 자녀들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하여 편법 증여한 바 증여세 추정

3 조사 대상자 선정 413명

-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자체 보유 과세정보, 자금출처 분석 시스템, 관계 기관 통보자료 등 다양한 경로와 방법으로 탈세혐의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 * 지난 2월,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에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설치하고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행위에 대한 동향 파악 중
- 이번 조사는 1인 법인을 설립하고 다수의 주택 및 분양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자 등 다주택 보유자와 자금 부당유출 혐의가 있는 법인,
 - 고액의 자산 증가에 비해 신고 소득 등 자금출처가 부족한 연소자, 고가주택 취득·고액전세 거래과정에서 부동산 취득자금 편법증여 혐의자 등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 또한,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3차에 걸쳐 통보되었던 탈세의심자료 중 미분석 자료 분석 결과 탈세혐의자와
 - * 국토교통부 內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국토교통부, 국세청,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검찰청, 경찰청, 한국감정원 등 7개 부처 참여)에서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제6조에 따라 부동산(주택·상가 등) 거래 신고 내용 조사
 - 매매거래시 업·다운계약 혐의자, 다수의 중개 수수료 신고를 누락한 혐의가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와 수입금액 누락 혐의 기획부동산 등
 - 부동산 거래 관련 다양한 탈세혐의를 망라하여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조사 대상자 선정 현황]

(단위 : 명)

총계	개 인					법인
	소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이상	
413	392	39	197	107	49	21

① 다주택 취득자 및 자금유출 혐의 법인 등 [65명]

- 규제지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국지적 과열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지역의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자체 과세정보를 바탕으로 자금출처를 분석한 결과
 - 소규모 자본금으로 1인 주주 법인을 설립하고 갭투자 등을 통해 다수의 주택과 분양권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자 등 다주택 취득자 56명
 - 법인 자금을 유출하여 고가 아파트, 꼬마빌딩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탈세혐의가 있는 9개 법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② 고액 자산 취득 연소자, 편법증여 및 사업소득 탈루를 통한 고가 주택 취득자·고액 전세입자 [213명]



- 국세청은 자산·부채·소득·소비 등 과세정보를 통합·연계하여 변칙 증여 등 탈세혐의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자금출처분석시스템」을 구축·활용하고 있으며
 - 이를 통해 뚜렷한 소득 없이 고액의 자산을 취득한 연소자 62명을 포착하고 편법증여 혐의를 검증하고자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 또한, 고가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신고소득이 미미하여 소득을 누락한 혐의가 있는 전문직, 뚜렷한 소득 없이 고액 자산가인 부모와 거주하며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자 등 44명과
- 출처가 불분명한 외화를 송금 받아 강남에 고액전세로 거주하는 소규모 사업자 등 사업소득 탈루혐의자, 편법증여 혐의가 있는 고액전세입자 107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 특히, 전세 보증금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이 아니므로 편법증여 가능성이 높아 소득과 지출 내역에 대해 보다 철저히 검증하였습니다.

③ '관계기관 합동조사' 통보자료 중 탈세혐의자 [100명]

- 지난해 10월부터 실시한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3차에 걸쳐 2,037건의 탈세의심자료가 통보되었습니다.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자료 수보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1차('19. 11. 28.)	2차('20. 2. 4.)	3차('20. 4. 21.)
수보 건수	2,037	532	670	835

- 국세청은 통보된 자료를 분석하여 세무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미분석 자료를 추가로 분석하여
 -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부모에게 임대하고 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치른 경우, 친척 소유의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매수자금을 동일 친척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등
 -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탈세혐의자 등 100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④ 업·다운 계약혐의자, 탈세혐의 중개업자, 부동산 투자 강사 등 [35명]

- 일부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고액의 분양권 등을 거래하면서 업·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가 발견되어 혐의자 16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 최근, 인터넷 등에서 부동산 투자 관련 강의를 통해 인지도를 높이고 다수의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며 직접 투자도 하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 이 중 인터넷을 통해 갭투자 등을 유도하면서 다수의 아파트 중개 수수료를 누락한 혐의가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 11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 또한, 수도권 일대 개발 예정지 인근의 토지를 헐값에 취득하고 허위·과장 광고로 고가에 판매하여 다수의 서민에게 피해를 입힌 8개 기획부동산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4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유형

가. 다주택 취득자, 자금유출 혐의 법인 등

- ◆ 직장인이 지방에 1인 주주 법인을 설립하고 주주 차입금으로 서울 소재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여 거주하면서 동 아파트를 담보로 취득자금을 대출 받아 다수의 분양권과 지방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나 최초 아파트 구입자금 등 자금출처 불분명
- ◆ 전문직 종사자가 수도권에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 한 후 1인 주주 법인까지 설립하여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나 신고소득 대비 취득금액이 과다하여, 사업소득 누락 및 편법 증여 혐의
- ◆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비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여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자녀 명의로 고가아파트 및 꼬마빌딩을 취득한 혐의
- ◆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가맹 개설비 및 인테리어 수익비를 신고 누락하고 현금매출을 과소 신고하여 배우자 명의로 다수의 아파트를 취득한 혐의

나. 고액 자산 취득 연소자, 고가 주택 취득자, 고액 전세입자

- ◆ 뚜렷한 소득·직업이 없는 연소자가 신도시 소재 상가를 부친과 공동명의로 ○○억원에 매입하였으나 그 취득자금 출처가 불분명하여 부친으로부터 편법 증여 받은 혐의
- ◆ 30대의 전문직 종사자가 수년간 서울지역에 다수의 아파트 및 주택을 취득한 바, 취득가액이 신고소득보다 ○○억원 이상 초과하고, 취득시점에 아버지가 △△억원의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어 아버지로부터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
- ◆ 신고소득이 미미한 40대 자영업자가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여 재력가인 아버지와 함께 거주 중인 바, 사업소득을 신고 누락하고 아버지로부터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
- ◆ 전자상거래업에 종사하는 30대가 신고 소득이 미미함에도 해외에서 외화가 송금되고 고액 전세로 입주하였으며, 고가의 승용차를 구입한 사실로 보아 사업소득 누락 및 편법증여 받은 혐의

다. '관계기관 합동조사' 통보자료

- ◆ 소득이 미미한 20대 근로자가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아버지에게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매수대금을 지급하여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
- ◆ 형으로부터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고액의 취득자금을 형으로부터 차입하여 이를 다시 형에게 지급한바 실제 차입이 아닌 편법증여 받은 혐의
- ◆ 운영하던 사업을 폐업하여 수년 간 소득이 전혀없는 30대가 고가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취득자금을 출처 불명의 예금과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소명하여 미등록 사업 및 취득 자금 편법증여 받은 혐의

라. 업·다운 계약 혐의자, 탈세혐의 중개업자 등

- ◆ 분양권 전매가 허용되는 지방 대도시 인기단지의 분양권을 프리미엄 ○억원에 양도하였음에도 ○천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
- ◆ 부동산 중개업자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갭투자를 유도하고 다수의 아파트 매매를 중개하며 중개수수료를 신고 누락한 혐의
- ◆ 수도권 임야를 매입하여 매입가보다 과다하게 높은 가격으로 다수에게 공유지분을 판매하면서 매출원가를 과다계상하여 법인세를 탈루한 기획부동산

5 조사 방법

금융조사 등을 통해 편법증여 여부 끝까지 추적·검증

-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이 제한되면서 자기자금 없이 특수관계자 등으로부터의 차입금으로 고가아파트를 취득하거나 전세로 입주한 경우,
 - 금융기관 계좌정보와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을 통해 자금의 원천과 흐름을 끝까지 추적하고,
 - 소득·재산·금융자료 등 재산내역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소비내역과의 연계분석을 통해 차입을 가장한 증여 여부 등 부동산 취득과정에서의 편법증여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관련인 및 법인까지 조사범위 확대

- 자금을 빌려준 친·인척 또는 특수관계 법인에 대하여는 신고내역 등을 확인하여 자금 조달 능력이 있는지를 검증하고
 - 자금조달 능력이 의심되거나 관련기업의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혐의 등이 있을 경우 관련 자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 자금 조성 및 회계처리 적정 여부, 수입금액 누락 및 법인자금 유출 여부까지 면밀히 점검할 계획입니다.

부채사후관리 강화 및 위법사항 엄정조치

- 검증결과 취득자금이 적정한 차입금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향후 원리금 상환이 자력으로 이루어지는 지 여부에 대해 부채 상환 전 과정을 끝까지 사후관리* 하고
 - * 부채 사후관리 점검횟수 연 1회 → 2회로 확대
 - 상환과정에서 대리변제 등이 확인될 경우 조사전환하여 탈루된 세금을 추징하겠습니다.
- 또한, 조사과정에서 명의신탁 등 부동산 거래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관계기관에 신속히 통보하고
 -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
 -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습니다.

6 향후 계획

부동산 거래 동향 정밀 파악 및 탈세행위 수집 강화

- 지난 2월 고가주택 거래가 많은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에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설치하고,
 - 부동산 시장 동향에 따라 나머지 지방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밝힌 바 있습니다.
- 최근 경기 서북부 및 충청지역 부동산 시장의 국지적 과열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탈세행위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 7월 1일자로 인천지방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에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추가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동향 파악, 신종 탈루유형 발굴, 부동산 거래 관련 탈루 정보 수집

대폭 확대되는 관계기관 통보자료 철저히 검증

-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서울시, 경기도 등) 등 관계기관에서 통보되는 탈세의심자료 및 실거래 기획조사 자료도 전수 분석하고 탈세혐의자는 예외없이 조사하겠습니다.
- 지난 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서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의 제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9월 예정)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종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억원 및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 (개정)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전체 주택거래 및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 증빙자료 제출대상: (종전)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거래 ⇒ (개정) 투기과열지구 전체 주택 거래

- 이에 따라 관계기관합동조사 결과 국세청에 통보되는 탈세의심자료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또한, 지난 6.17.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강남·송파권역 및 용산권역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도 조사 종료 후 통보될 예정이므로
 -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부동산불법행위 수사 확대·강화」('20.7.15)
 - 거래내역에 대해 자금 조달 증빙 등을 확인하여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시 과태료 부과, 편법 증여·법인자금 유용 등 탈세의심자료 국세청 통보
- 통보되는 자료에 대하여도 부동산 취득 내역, 자금 조달 과정, 제세 신고 사항 등을 치밀하게 전수 검증할 계획입니다.

탈세행위는 끝까지 추적하여 철저히 과세

- 김현준 국세청장은 간부회의 등에서
 - '개인·법인의 다주택 취득, 보유·임대, 양도 등 부동산 거래 전(全)과정에서 정당한 세금 없이 편법적으로 부(富)를 축적하거나 이전하는 사례가 없도록 끝까지 추적하여 철저히 과세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 국세청은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특히, 주택을 이용한 불로소득에 대하여는 다양한 경로와 방법으로 세금 탈루행위를 파악하여 엄정히 대응하겠습니다.
 -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전략이므로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당부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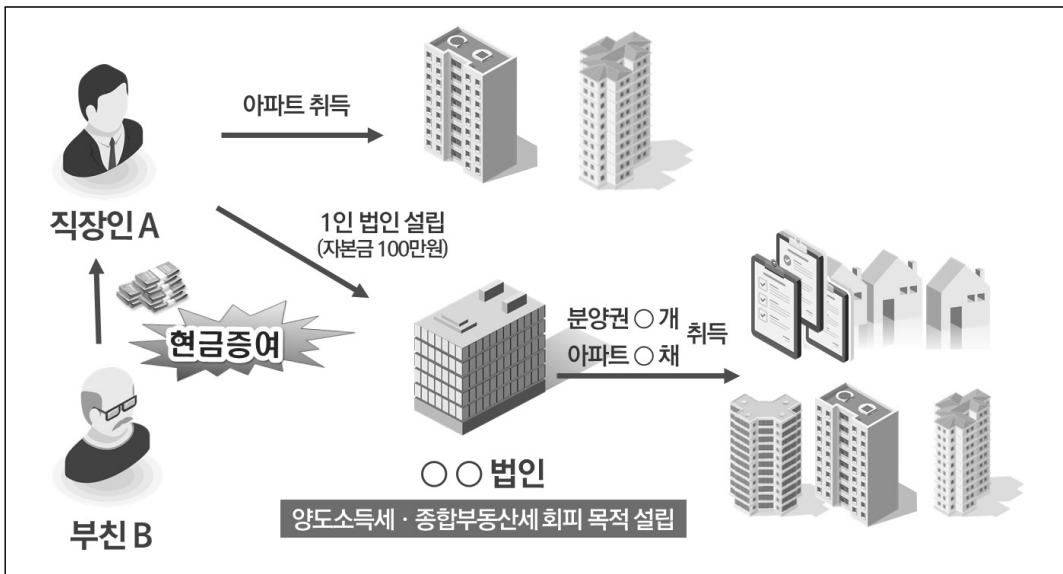
붙임 1 - 세무조사 주요 선정사례

사례 1	소규모 자본금으로 1인 주주 법인을 설립하고 주택을 다수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친으로부터 편법증여받은 혐의
------	--

● 인적사항

- 고가 부동산 취득자 : 직장인 A
- 주 소: ○○시

● 주요 혐의



- 직장인 A가 지방에 1인 주주 법인을 설립하고 주주 차입금으로 서울 소재 고가 아파트를 취득함
- 그 후 동 아파트를 담보로 취득자금을 대출받아 다수의 분양권과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나 개인소유 아파트 취득자금 및 주주 대여금의 자금출처가 불분명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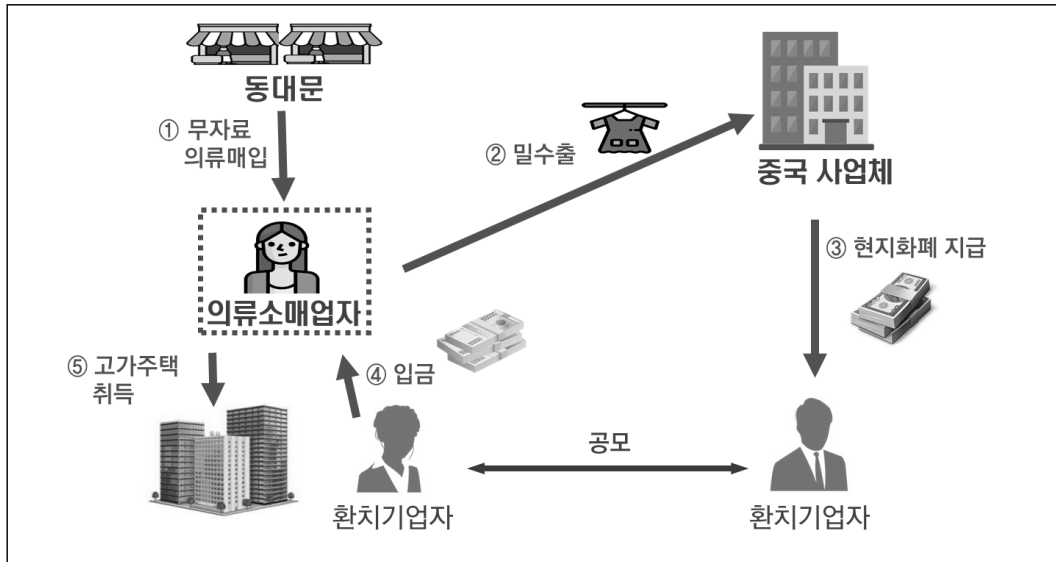
붙임 2 - 세무조사 주요 추정사례

사례 1	무자료 매입한 의류를 밀수출하고 대금을 환치기로 수령하여 소득세를 탈루하고 고가아파트 취득
------	---

● 인적사항

- 고가 부동산 취득자 : 사업자 A(의류 소매업자)
- 주 소: ○○시

● 주요 조사내용



- 의류소매업을 영위하는 A는 고가 아파트 등을 취득하였으나, 자금출처가 부족하고, 거액이 ATM기기와 중국 국적자들로부터 분산 입금되어 자금출처 부족 및 역외탈세 혐의로 조사 선정
- 조사 결과 무자료로 매입한 의류를 중국에 밀수출하고 판매대금을 일명 '환치기'를 통해 수령하여 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 확인

● 조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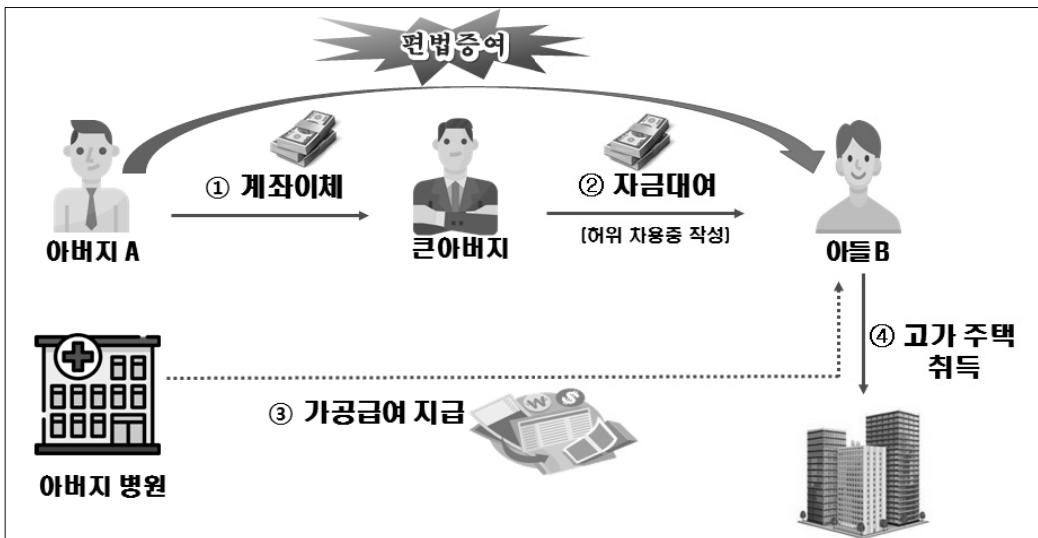
- 사업소득 탈루에 대해 소득세 등 관련 제세 ○억 원 추정

사례 2	아버지로부터 가공급여 계상 및 가장 차입거래(허위 차용증 작성)를 통해 현금을 편법증여 받아 고가부동산 취득
------	--

● 인적사항

- 증여자: 아버지 A
- 수증자: 자녀 B
- 주 소: ○○시

● 주요 조사내용



- 특별한 소득이 없는 20세 연소자 B가 고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자산가인 부모에게서 취득 자금을 증여 받은 혐의로 조사 선정
- 자금출처조사 결과, 아버지 A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실제 근무사실 없이 가공으로 수령한 급여와
 - 큰아버지 차입금으로 가장*(허위 차용증 작성, 금융거래 조작)하여 아버지로부터 편법증여 받은 자금으로 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 확인
 - * 큰아버지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기 직전 아버지 A가 큰아버지 계좌에 대금 입금

● 조치사항

- 아버지로부터 편법증여 받은 현금에 대한 증여세 ○억 원 추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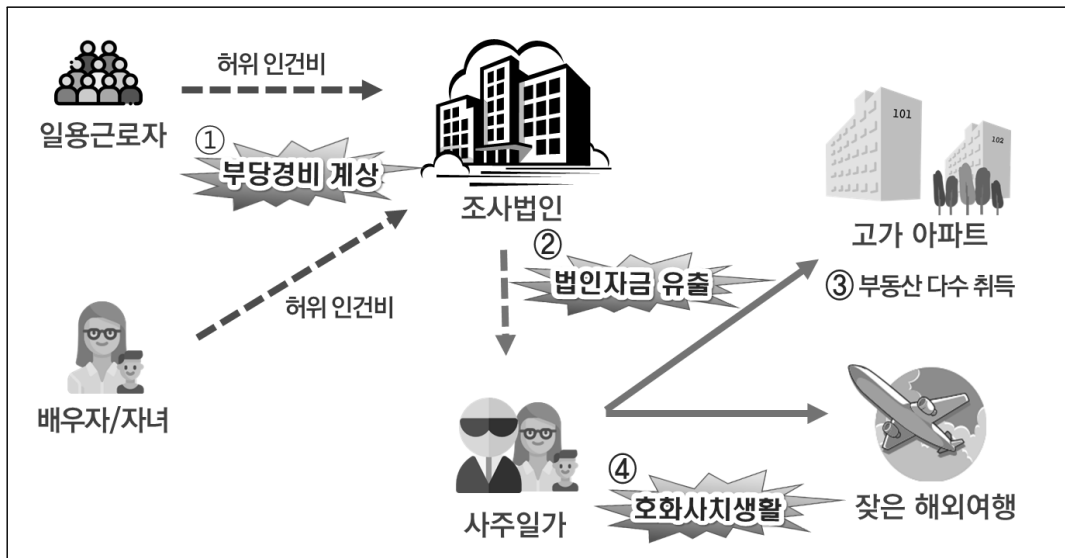
사례 3

고객의 가공인건비(일용직)를 계상하여 법인자금을 불법 유출하고 사주일가의 부동산 취득 및 호화생활에 사용

● 인적사항

- 상 호: (주)△△△
- 주 소: ○○시

○ 대표자(사주): ○○○



● 주요 조사내용

- (주)△△△은 공사 전문업체로 일용근로자 인건비 지급액을 과다하게 계상하고 근무사실이 없는 가족인건비를 가공계상 하는 등 거액의 가공인건비를 계상하여 법인소득 탈루
- 가공인건비로 조성된 자금 등으로 사주일가의 고가아파트 등 부동산 취득에 사용하고, 잦은 해외여행 등 호화사치 생활영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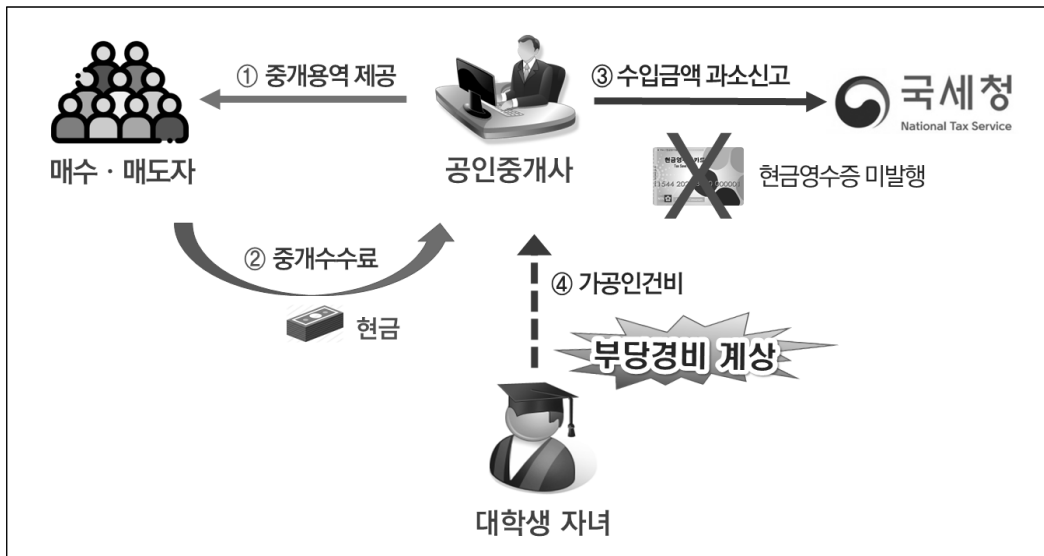
● 조치사항

- 법인세, 소득세, 증여세 등 ○○억원 추정

사례 4	현금으로 수취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과소신고하고 근무사실 없는 자녀의 가공 인건비를 계상하여 소득 탈루
------	---

● 인적사항

- 상 호: △△△
- 주 소: ○○시
- 대표자: ○ ○ ○



● 주요 조사내용

- ○ ○ ○ 은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면서 고액의 중개수수료를 현금수취하고 수입금액을 과소 신고하는 수법으로 수입금액 탈루
 - 특히, 현금으로 수취한 중개수수료에 대해서는 ATM기를 이용하여 현금입금하고 대부분 신고누락
- 부동산중개업의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나 현금영수증 미발급

● 조치사항

-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 ○억 원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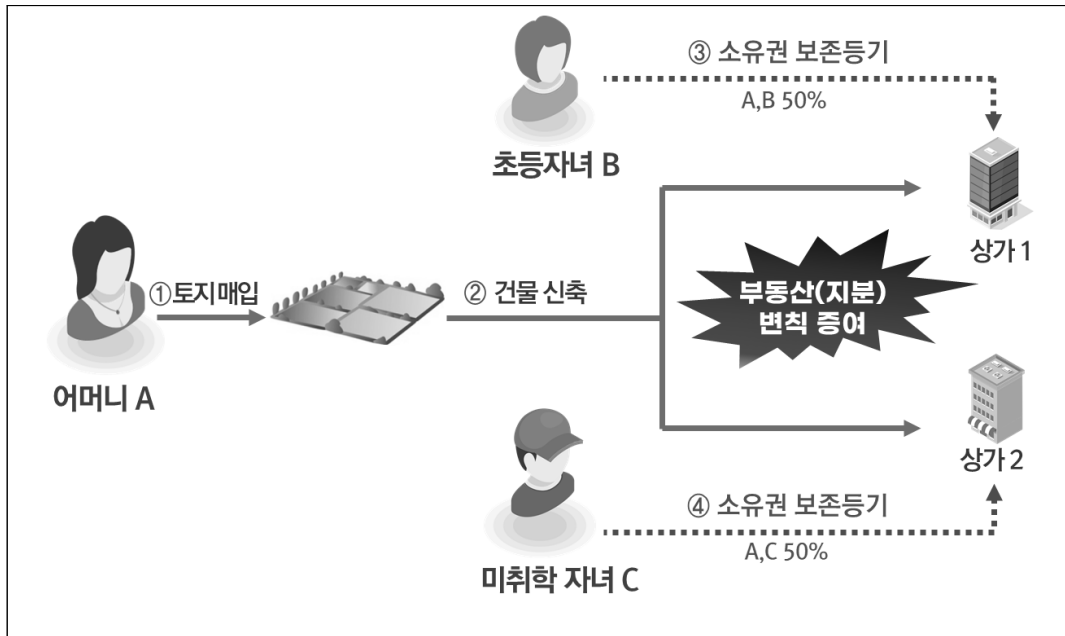


사례 5 미성년 자녀에게 상가 신축 시 지분 변칙증여

● 인적사항

- 증여자: 어머니 A
- 수증자: 미성년자 B, C
- 소재지: △△시

● 주요 조사내용



- 연령·소득에 비해 고가의 상가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미성년 자녀 B, C의 재산 취득자금 출처를 검증한 바
 -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어머니 A가 수도권 소재 토지를 매입하여 상가 2동을 신축하고
 - 신축된 건물 지분(50%)을 자녀 B, C명의로登記하는 방법으로 각각 변칙 증여하고 취득세를 대납하는 등 증여세 탈루

● 조치사항

- 변칙 증여받은 건물 지분 등에 대해 증여세 ○억원 추징

다수의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 탈세혐의자 세무조사

- 국세청, 2020. 8

-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들의 국내 아파트 취득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연도별 취득 현황) '17년 ~ '20년 5월까지 23,219명의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 23,167채 (거래금액 7조 6,726억 원)를 취득하였으며, 특히 금년에는 거래건수와 거래금액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 * 금년 1월~5월에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를 3,514건(거래금액 총 1조 2,539억 원) 취득하여 전년 동기(2,768건, 8,407억 원) 대비 건수 26.9%(746건), 금액 49.1%(4,132억 원) 증가
 - * 연도별 취득건수(건): ('17) 5,308 → ('18) 6,974 → ('19) 7,371 → ('20.5월말) 3,514
 - (국가별 취득 현황) 국가별로는 중국인(13,573건), 미국인(4,282건)이 가장 많았으며 이후 캐나다, 대만, 호주, 일본 순이었습니다.
 - * 아파트 취득 외국인 23,219명 중 '검은머리 외국인(한국 주민번호 보유자)'은 985명(4.2%)
 - (지역별 취득 현황) 아파트 취득 지역을 확인해 본 결과, 서울이 4,473건, 거래금액 기준 3조 2,725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기도가 10,093건(거래금액 2조 7,483억 원), 인천시가 2,674건(거래금액 6,254억 원)순으로 수도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 서울 강남3구의 경우, 취득건수는 강남구 517건, 서초구 391건, 송파구 244건이고, 취득 금액은 각각 6,678억 원, 4,392억 원, 2,406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 (다주택 취득자 현황) 두 채 이상의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은 1,036명(2주택 866명, 3주택 105명, 4주택 이상 65명)으로 이들이 취득한 아파트는 총 2,467채이며, 이중에는 42채 (취득금액 67억 원)를 취득한 외국인(최다 취득자)도 있었습니다.
 - (실거주 현황) 또한, 외국인 소유주의 아파트 실거주 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전체 취득 아파트 23,167건 중 소유주가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는 7,569건*(32.7%)에 이르렀습니다.
 - * 현재 뿐만 아니라, 취득 후 한번도 거주하지 않은 아파트 숫자를 의미
- 외국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국내 아파트를 여러 채 취득·보유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투기성 수요라 의심됩니다.



- 이에 국세청은 주택임대소득 등의 탈루 혐의가 있는 외국인 다주택 보유자 등 4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를 취득·보유·양도하는 경우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비거주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거래 관련 납세의무



(취득 단계) 거주자와 동일하게 취득세·등록세 납부



(보유 단계) 거주자와 동일하게 주택임대소득 등에 대해 세금납부

※ 인별 연간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선택 가능



(양도 단계) 조세조약 및 세법에 따라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양도소득은 국내에서 과세

※ 거주자와 동일한 납세의무를 부담하나,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적용 배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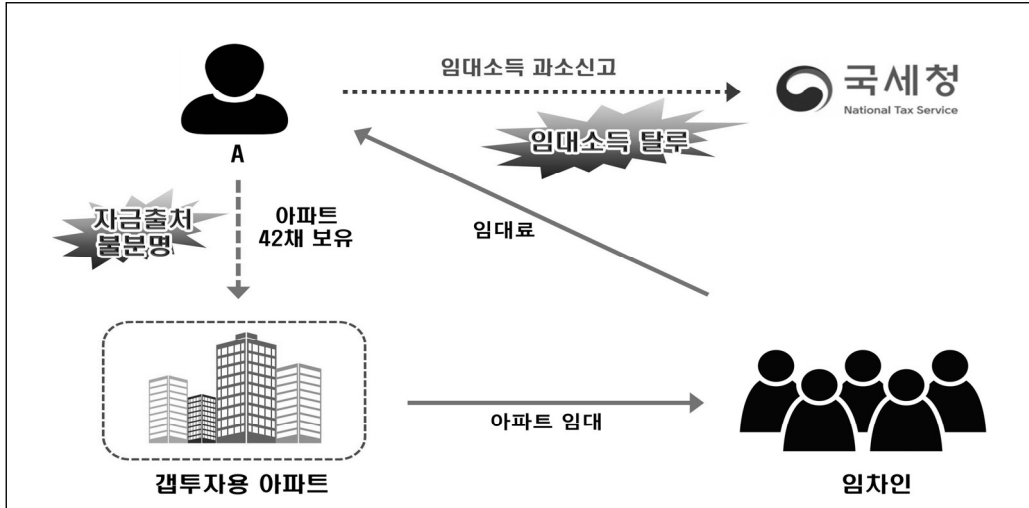
- 금번 조사를 통해 조사대상자의 임대소득 탈루는 물론, 취득자금 출처, 양도했을 경우에는 양도소득 탈루 혐의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외국인이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으로 국내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에 대해서는, 조세조약 등에 따라 해당자의 거주지국 국세청(과세당국)에 관련 내용을 정보교환(exchange of information) 형태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 실거주 이외의 목적으로 외국의 부동산을 취득·보유 시, 거주지국 과세당국의 관리체계에 서 벗어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 해외부동산을 이용한 소득은닉·신고의무 위반과 같은 역외탈세 혐의에 대해 해당국에서 세무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정보교환 활용사례) 2019년, 내국인이 몰래 보유 중이던 외국소재 주택 양도(39억원 상당) 내용을 해당국 과세당국에서 대한민국 국세청에 통보. 이를 토대로 세무조사를 실시 하여 부동산 양도소득세,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15억원을 추징한 바 있음.

- 앞으로도 국세청은 외국자본에 의한 부동산(아파트) 가격 상승 우려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투기성 보유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취득·보유·양도 전 과정에 걸쳐 철저한 세무검증을 실시하겠습니다.
- 또한, 부동산 관련 세금 탈루에 대해서는 내국인·외국인에 대한 구별 없이 엄정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 이번 조사 착수 사례

사례 1	미국인이 수도권 및 충청권 소형 아파트 42채를 보유·임대 하면서 임대소득을 과소 신고한 혐의
------	--



● 주요 탈루 혐의

- 미국 국적의 외국인 A(40대)는 '18년부터 수도권과 충청권 지역의 소형 아파트 42채(67억 원 상당)를 갭투자 방식을 통해 집중 취득하였음.
- A가 보유한 아파트 중 일부는 주택임대업 등록을 하지 않아 임대소득을 과소 신고한 혐의
- 또한, A는 아파트 수십 채를 취득할 만큼 한국 내 소득이 많거나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취득 당시 외국으로부터 외환 수취액도 없는 등 아파트 취득 자금출처가 불분명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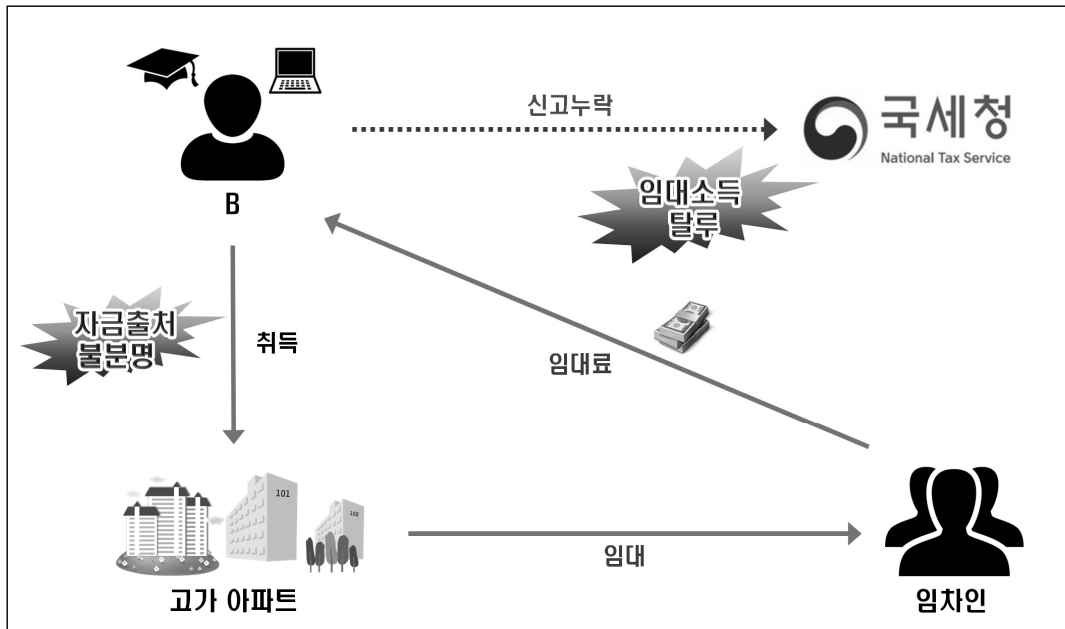
● 조사 방향

- 주택임대소득 과소신고 혐의 및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 등에 대해 정밀 검증, 해당국 과세당국에 자료 통보



사례 2

유학목적으로 입국한 중국인이 전국에 8채의 아파트 취득, 고액 전·월세로 임대 하였으나 신고누락



● 주요 탈루 혐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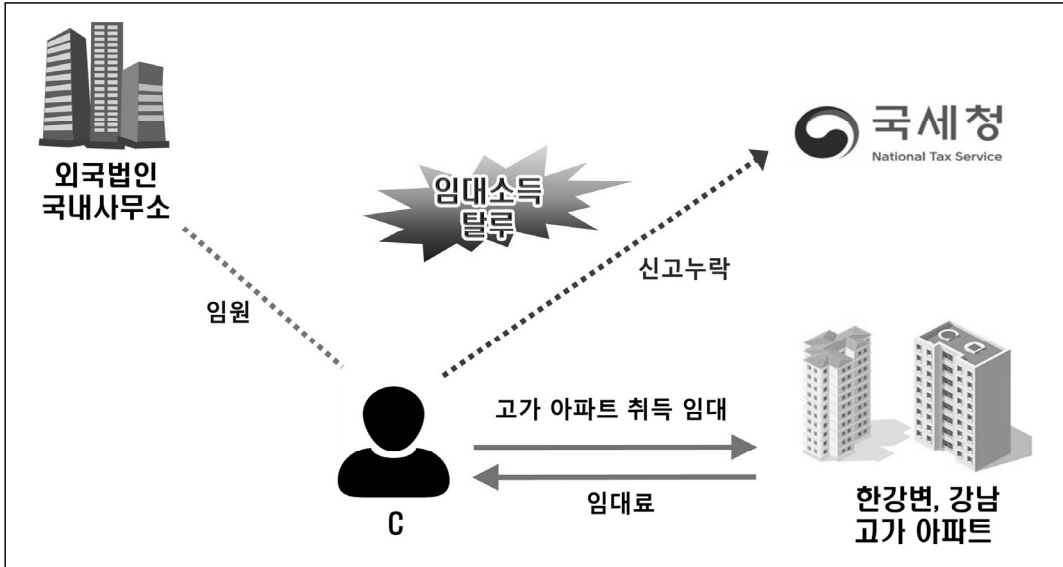
- 외국인 B(30대)는 유학목적으로 입국하여 학업(한국어 어학과정)을 마친 후 국내에서 취업하여 수도권에 거주 중인 중국인으로,
 - 최근 서울 소재 고가 아파트 및 경기, 인천, 부산 등 전국 여러 곳에서 아파트 8채를 취득하고, 이중 7채를 전·월세로 임대하였으나 임대수입을 신고 누락한 혐의
 - 또한, 여러 채의 아파트를 단기간에 취득할 만큼 한국 내 소득이 많거나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본국으로부터 수억 원 가량의 외환수취액은 있었으나 아파트 취득자금에는 부족

● 조사 방향

- 주택임대소득 누락 혐의 및 아파트 취득자금 출처 등에 대해 정밀 검증, 해당국 과세당국에 자료 통보

사례 3

외국법인 국내사무소 임원이 고가아파트 여러 채를 월세로 임대하면서 임대소득을 신고 누락한 혐의



● 주요 탈루 혐의

- 외국인 C(50대)는 외국법인 국내사무소 임원으로 근무 중인 자로, 한강변에 위치한 고가 아파트(시가 45억 원 상당) 및 강남 소재 유명 아파트(시가 30억 원 상당) 등 아파트 4채를 취득(총 시가 120억 원 상당)
- 외국인은 월세를 내더라도 월세 세액공제 등을 받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본인이 거주 중인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3채를 외국인 주재원 등에게 임대하여 고액의 월세**를 선불로 받고 주택임대소득을 신고 누락한 혐의

* 외국인 근로자는 주민등록법상 세대주에 해당되지 않아 월세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 한강변 고가 아파트와 강남 유명 아파트의 월세 시세는 각각 1,000만 원 이상임.

● 조사 방향

- 주택임대소득 누락 혐의 정밀 검증 및 사업자 직권 등록, 가산세 부과 등 엄정하게 조사, 해당국 과세당국에 자료 통보

코로나19로 인한 반기보고서 등 제출지연 관련 제재면제

- 금융위원회, 2020. 8

◆ 증권선물위원회는 8.5. 코로나19로 인해 결산 등이 지연되어 '20년 반기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 15사에 대하여 행정제재를 면제

1. 그간의 경과

- 금융위원회는 지난 7.15.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분·반기 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제재(과징금 등)를 면제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 * 「코로나19로 인한 분·반기보고서 제출지연 제재면제 등 처리계획」
-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신청기간(7.20.~7.24.) 동안 분·반기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회사·감사인으로부터 제재면제 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2. 제재면제 신청 접수 및 검토

- 15사가 '20년 반기보고서 등*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면제를 신청하였습니다.
 - * 반기보고서 14사, 소액매출공시서류 1사
- 이 중 13사가 코스닥시장 상장사이며, 2사는 비상장사입니다.
- 신청사유는 주요사업장·종속회사 등이 중국·베트남(10사) 등에 위치하여 현지 정부의 이동 봉쇄령 조치, 외국인 입국제한 등에 따른 결산 지연 문제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 금융감독원은 신청내용이 제재면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제출된 서류(신청서, 의견서 등)를 확인하였으며,
 - 해당 회사가 상장폐지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소 협조를 받고, 신청회사로부터 추가 자료를 제출 받아 충실히 점검하였습니다.

3. 제재면제 및 제출기한 연장

- 증권선물위원회는 '20년 반기보고서 등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면제를 신청한 15사 전체에 대해 제재면제 결정을 하였습니다.
- 이번에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는 다음과 같이 '20년 반기보고서 등의 제출기한이 30일 연장됩니다.

위반 항목	법인 구분	회사 수	연장된 제출기한
'20년 반기보고서 등	내국법인	11	8.14. → 9.14.
	주권상장 외국법인	4	8.31. → 9.28.
합 계		15	-

- 투자자 보호 및 관련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상장법인은 제재면제 신청 처리결과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8월 7일(금)	8월 10일(월)	8월 11일(화)	8월 12일(수)
미 달 러 (USD)	1184.30	1185.90	1186.70	1184.90
일 본 엔 (JPY)	1122.45	1119.88	1119.90	1112.63
영 국 파 운 드 (GBP)	1556.64	1547.78	1551.43	1546.83
캐 나 다 달 러 (CAD)	889.92	885.89	888.38	890.63
홍 콩 달 러 (HKD)	152.81	153.01	153.12	152.89
위 안 화 (CNH)	170.64	170.42	170.37	170.41
유 로 화 (EUR)	1406.89	1397.29	1393.13	1391.01
호 주 달 러 (AUD)	857.02	848.69	848.43	846.55
싱 가 폴 달 러 (SGD)	865.21	863.79	863.90	863.06
말레이시아링기트 (MYR)	282.75	283.20	282.85	282.42

고용노동부, 2021년 최저임금 시간급 8,720원으로 고시

- 고용노동부, 2020. 8

- 고용노동부는 2021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8,720원(인상률 1.5%, 증 130원)으로 8월 5일(수) 고시하였다.
 -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822,480원이며,
 -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 최저임금위원회는 이해관계자 간담회(15회), 권역별 토론회(5회), 현장방문(2회) 및 9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서 심의·의결했으며,

- △ (월 환산액 병기) 6.25. '시간급, 월환산액 병기' 의결(만장일치)
 - △ (업종별 구분) 6.29. 찬성 11표, 반대 14표로 부결(단일 최저임금 적용)
 - △ (최저임금 수준) 7.14. 찬성 9표, 반대 5표로 '시간급 8,720원' 가결
- 고용부는 7.20. '2021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하였고 7.30.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으며, 노사단체의 이의제기는 없었다.
 - * (최저임금법 제9조제2항)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안착을 위해 홍보·안내 활동, 노무관리 지도 및 근로감독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